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79
----------	-------

발의연월일 : 2021. 12. 20.

발 의 자 : 이광재 · 김경협 · 김병기  
송재호 · 김주영 · 송옥주  
최기상 · 어기구 · 안호영  
김진표 · 강선우 · 박영순  
허영 · 윤영덕 · 김영주  
박홍근 · 임호선 · 이장섭  
윤준병 · 강훈식 · 이탄희  
변재일 · 허종식 · 서영석  
김승원 의원(25명)

### 제안이유

전국 하천의 87.9%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하며,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

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집행·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고, 하천관리 정보체계도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

1) 하천 및 하천수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기술 기반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도록 하천 관리원칙에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2) 하천관리 정보체계 구축시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및 댐과 직접 연결되어 국가하천의 홍수량에 영향을 주거나 국가하천의 홍수위에 영향을 받는 하천, 도심을 관류하여 홍수피해를 받는 인구가 많은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7조의2 신설).
- 3)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생태문화공간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을 받는 하천 구간
  2. 국가하천 홍수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하천
  3. 댐 직하류 등 댐 방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하천
  4.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으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신속한 홍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술,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하여 사전에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하천기본계획”을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생태문화 공간조성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하천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대하여는 제27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을 받는 하천 구간 2. 국가하천 홍수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하천 3. 댐 직하류 등 댐 방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하천 4.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p><u>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으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신속한 홍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u></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p>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술,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	②-----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⑧ (생략)

-----  
-----  
-----  
-----  
----- 대하여  
사전에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  
---. <후단 삭제> -----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  
부 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생태문화 공간조성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기본계획-----  
--.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

<p><u>&lt;신 설&gt;</u></p>	<p>항까지와 같음)</p> <p><u>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u></p> <p><u>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u></p>
<p>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u></p>